

교육정책이 사회계층간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일본의 경우

김기현*

미와 사토시(三輪 哲)**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상급학교 진학여부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의 시계열적인 추이가 교육정책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들은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는 빠른 교육확대에 불구하고 지난 세기동안 지속되어왔으며 어떠한 형태의 교육개혁도 교육 불평등의 본질을 바꾸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강력하게 교육에 개입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정부 교육정책은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연구 양 국가에서 매우 강력한 교육개혁이 추진된 시기에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1945년 2차대전 이후 구학제에서 신학제로 전환된 시점에 대한 분석에서 단지 일본의 사례에서만 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가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한국 역시 같은 시기 상급학교 진학이 용이한 단선형 학제를 도입하고 의무교육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교육 확대를 빠르게 진전시킨 반면 교육기회의 불평등까지 감소시키지는 못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 정부가 공공재원의 부족으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적 투자를 하지 못한 반면, 일본 정부는 1940년대 동안 이를 실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970-80년대에 추진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에서 고등교육 억제 정책을 폈던 일본과 고등교육 확대 정책을 폈던 한국 간에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의 추이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두 국가 모두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격차는 개혁이 추진된 전후 5년간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 유지되었다.

1. 서론: 문제제기와 분석과제

많은 연구자들은 정부가 교육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한 사회의 교육 기회를 규정짓고 교육제도의 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Buchman and Hannum, 2001: 80).

*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김기현은 21세기 COE 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인 東北大의 「사회계층과 불평등연구교육센터」로부터 연구 지원을 받았음을 밝힙니다(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at Tohoku University under the 21st Century COE Program).

** 동경대(東京大) 사회과학연구소 조교수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육정책이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 포스트(Post, 1994: 121)는 정부의 정책적 행위를 측정하기 어렵고 종종 사회 전체적인 변화와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 불평등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는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나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 간에 아버지의 직업이나 교육과 같은 가족배경이 교육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시계열적 변화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Blossfeld and Shavit, 1993). 이 연구는 사회계층간 교육격차가 모든 국가에서 일관되게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고 지난 수십 년 간 유지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변화시도도 교육 불평등의 감소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다룬 몇몇 연구들 역시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Dronkers, 1993; Smith and Cheung, 1986). 다만, 중국(Deng and Treiman, 1997; Zhou, Moen and Tuma, 1998), 홍콩(Post, 1994), 프랑스(Garnier et al, 1989) 등 정부가 교육에 대해 강력하게 개입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국가들을 분석한 몇몇 연구들은 정부 정책이 사회계층간 교육격차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교육정책이 사회계층간 교육격차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교육정책이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흥미로운 연구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국가 모두 정부가 강력하게 교육에 개입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전후 교육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 교육정책은 의무교육의 도입과 같이 교육 기회의 확대 혹은 축소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육 불평등은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사회 계층간 격차로 접근할 것이다.

이제 다음절에서는 선행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교육정책과 교육 불평등의 추이를, 그리고 이 연구의 분석 자료, 분석 모형을 소개한 후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교육 정책과 불평등: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

교육 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가족배경과 상급학교 진학 여부와의 관련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여러 연구자들은 이 연관성이 상급학교 진학단계에서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하였다(Mare, 1993: 351). 이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증거는 ‘지속적인 불평등(persistent inequality)’ 가설로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격차는 빠른 교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령 코호트(age cohort)별로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 사회계층간 격차는 교육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 왔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가설들이 제안되었다. 라프터리와 하우트(Raftery and Hout, 1993)는 아일랜드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최대한 유지된다는 MMI(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가설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상위 계층의 진학률이 100%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회계층간 격차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지

적한다. 좋은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부모들과 이들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막고 있다기보다는 단지 본인들 스스로의 목표 달성에 흥미를 가질 뿐이며 이러한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은 그 귀결로 불평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Hout, Raftery, and Bell, 1993: 26).

루카스(Lucas, 2001)는 교육 불평등이 효과적으로 유지된다는 EMI(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육 계열화(tracking system)를 고려하여 어떻게 사회계층간 격차가 효과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규명한 것이다. 그는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상급학교 진학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질적으로 이점을 갖고 있는 계열로의 진학 여부를 놓고 진행된다고 지적한다. 곧 MMI 가설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위 계층의 진학률이 포화상태(saturation)에 도달한다고 해서 사회계층간 격차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적 차별화(quantitative differentiation)가 질적 차별화(qualitative differentiation)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브린과 존슨(Breen and Jonsson, 2000)은 경로 의존 가설(path dependence hypothesis)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상위 단계로의 진학 가능성은 학생들이 마주치게 되는 선택의 국면인 교육계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중등교육단계에서 일반계열로 갈 것인가, 혹은 실업계열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고 이러한 선택은 고등교육단계로의 진학 여부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이 단계에서 전문대학으로 갈 것인가, 혹은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역시 동일한 선택의 기로라고 할 수 있다.

브린과 골드소프(Breen and Goldthorpe, 1997)는 사회계층간 불평등이 유지되는 이유를 상대적 위험 회피(relative risk aversion)로 설명하고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어떤 사회경제적 위치에 놓여 있는 부모들일지라도 모두 그들의 자녀가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에 도달하기(상승이동)를 바라고 있으며 최소한 자신보다 낮은 수준의 학력을 갖는 것(하강이동)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 곧 하강이동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 계층 간에 차이가 없지만 그 결과는 사회 계층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달리, 노동계층의 부모들과 자녀들은 중간계급 혹은 노동계층 수준에 만족하는 반면 중간계층의 부모들과 자녀들은 적어도 중간계층 수준에 도달해야만 만족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층간 격차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은 부모와 자녀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설명을 주로 교육의 공급 측면(정부)보다는 수요 측면(국민)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제도가 정책을 관할하는 정부는 교육 확대를 촉진하든 억제하든 상관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에 개입한다. 어떤 국가들은 빠른 확대를 가져오는 교육의 탈규제화와 민간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교육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 한 국가 내에서도 교육정책은 정책적 우선순위나 당면 목표의 성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모해 왔다.

아럼, 가모란과 사빗(Arum, Gamoran, and Shavit, 2004: 14)에 따르면, 각 국가의 교육제도는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교육수요에 기초한 시스템(demand-driven system for the population)과 정부의 교육정책이라는 교육공급에 기초한 시스템(supply-driven system)이 그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수요 측면의 교육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공급 측

면의 교육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보다 보다 빠르고 차별화(differentiated)된 교육 확대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교육 불평등과 관련하여 보다 규제적인 입장을 취하는 공급 측면의 교육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상위계층들은 새로운 교육 기회에 대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수요 측면의 교육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하위계층들은 상위 계층보다 더욱더 빠르게 교육 확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결국, 선행 연구들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교육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공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모아져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례연구들은 특별히 교육 정책이 사회계층간 교육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찾는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드론크스(Dronkers, 1993)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교육 개혁은 단지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었을 뿐 학생들의 선발과 배분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격차는 달라지지 않았다. 스미스와 청(Smith and Cheung, 1986) 역시 필리핀에서 빠른 교육 확대가 이루어 졌으나 상급학교 이행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격차는 놀랍게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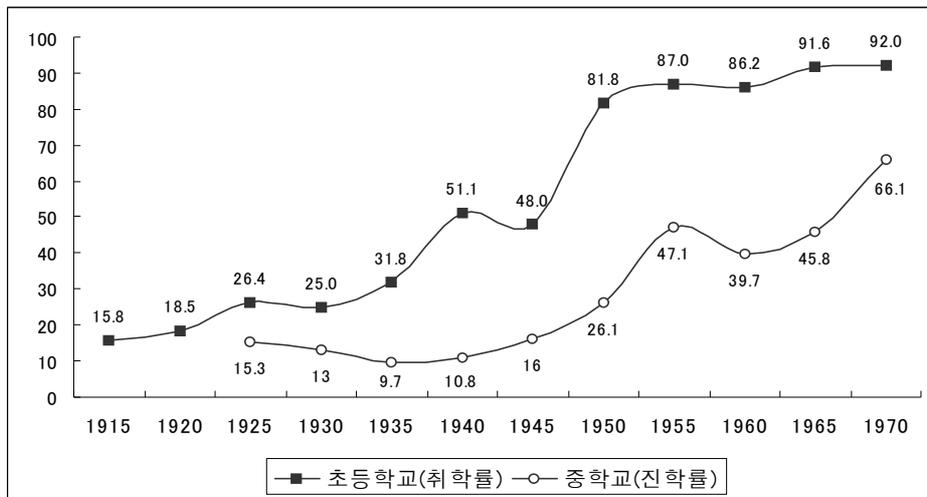
반면, 포스트(Post, 1994)는 홍콩 사례를 통해 ‘지속적인 불평등’ 가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홍콩의 영국 총독 맥레호스(MacLehose, Murray)가 1978년 중등교육에 대해서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1970년대 동안 의무교육 정착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하였는데, 이러한 교육 정책은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의 이행에 있어서 가족배경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릴라드와 윌리스(Lillard와 Willis, 1994) 역시 말레이시아에서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NEP)이 교육 불평등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하였다. 1969년 5월 토착 말레이인(bumiputra)과 화교 중국인 사이에 대규모 인종분쟁이 발생한 이후 라작(Razak, Tun Abdul) 총리는 화교들이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민인 말레이인들에게 경제적 특혜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정책을 1971년부터 추진하였으며 이 정책은 1990년까지 20년 간 지속되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신경제정책은 화교도, 인도인들과 말레이인간의 높은 교육격차를 줄여줄게 했으며 심지어 말레이인들의 교육수준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초래하였다. 중국의 문화혁명은 매우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문화혁명의 영향을 분석한 일련의 연구들은 문화혁명이 자녀들의 교육성취에 있어서 상류층의 이점을 극단적으로 없애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였다(Deng and Treiman, 1997; Zhou, Moen and Tuma, 1998).

III.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교육 제도와 정책에 있어서 유사한 대전환을 경험하였다. 1945년 종전 이후 연합군은 두 국가의 구 교육제도(이하 ‘구학제’)를 미국식의 새로운 교육제도(이하 ‘신학제’)로 바꾸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교육과정과 취업을 위한 실업교육과정이 완벽하게 분리된 복선형 학제에서 6-3-3-4의 단선형 학제를 갖게 된 역사적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두 국가의 의무교육은 이 시기동안 확대되었다. 1947년 일본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확대되었으며 1950년대 동안 중학교는 교육 참여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식적인 기준이 되

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1946년 미군정 시기에 도입되어 추진되었다(이광호, 1991; 이길상, 2003). 이길상(2003: 15-17)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교육심의회 초등교육분과위원회는 1946년 1월 24일 분과회의의 검토를 거쳐 1월 26일 만장일치로 의무교육안을 가결하였다. 미군정의 학무국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1946년 2월 21일 1946년부터 1951년까지 6년간 6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학령아동 400만 명을 모두 취학케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미군정의 문교부는 1946년 5월 28일에 1946년 9월부터 의무교육을 시행한다는 의무교육 초년도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¹⁾.

[그림 1] 한국의 초등학교 취학률과 중학교 진학률 추이(1915-1970)



출처: 1949년 이전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朝鮮總督府(1931, 1941)와 古川宣子(1996), 허수열(2005) 등을 참조하였고 주로 오성철(2000)을 따랐으나 서당에 다닌 학생수를 추가하여 재계산하였음. 1945년부터 1970년까지의 취학률은 木村光彦(1997), 한국교육10년사간행회(1960)와 문교부(1959),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교육개발원(2003)을 따랐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은 1940년 이전의 경우 주익중(1998)을, 이후의 진학률은 문교부(1958, 1965),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교육개발원(2003)을 따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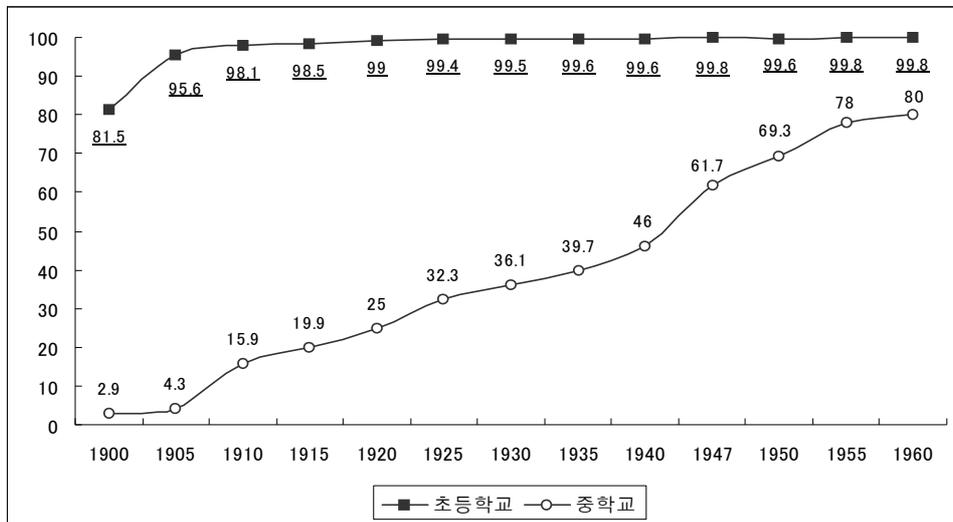
[그림 1]은 1915년에서 1970년까지 한국의 초등학교의 취학률과 중학교 진학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

- 1)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은 1946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의무교육의 법제화는 미군정 하에서 추진되지 않았고 정부수립이후로 미루어졌다. 1948년 헌법이 제정·공포되어 의무교육은 헌법 제31조에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등으로 규정되었다. 이어서 1949년 12월 교육법이 공포되었으며, 1952년 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되었다. 교육법 제8조는 ① 모든 국민은 6년(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경우에는 6년에서 해당 연수를 뺀 연수를 말한다)의 초등교육과 3년(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해당 연수를 뺀 연수를 말한다)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③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상기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정부수립이후 의무교육제도는 문교부의 6개년 계획 발표와 더불어 1950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한국전쟁의 반발과 교실부족, 교원 확보 미비 등으로 전면적인 무상 의무교육의 실시는 1960년대 중반에야 현실화되었다. 교육법에 명시된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에서 시작하여 1994년 읍·면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나 전 국민의 9년간 의무교육은 2004년에야 실현되었다.

다. 한국이 일제로부터 1945년 해방되었을 때 초등학교에 취학한 학생들의 비율은 해당 학령인구 중 단지 48.0%였으며 13세 이하 문맹률 역시 78% 이상이었다(木村光彦, 1997). 초등교육은 193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확대되었으나²⁾ 초등학교 졸업생 중 중학교에 진학한 비율은 식민지 시기동안 증가하지 않았다. 주익중(1998: 102)에 따르면, 중학교 진학률은 1925년 15%에서 1942년 11%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1945년 해방이후 한국의 교육기회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1945년 48%에서 1948년 75%로 4년간 무려 27% 포인트나 증가하였으며 중학교 진학률도 2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문교부, 1958). 한국인의 문맹률 역시 1945년 78%에서 1948년 41%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림 2]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률 추이(1900-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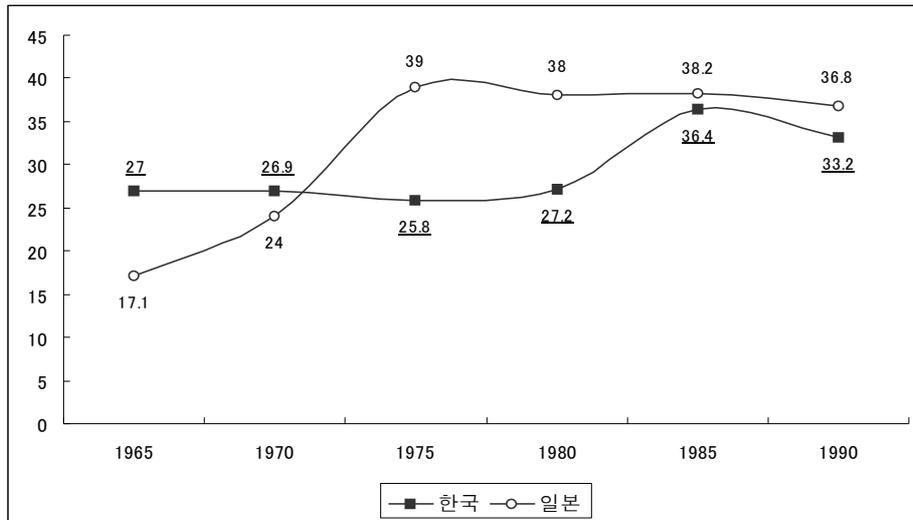


출처: 文部省調査局(1962)

[그림 2]는 1900년부터 1960년까지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서구 사회보다 늦게 교육제도의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초등교육의 취학률은 1900년에 이미 80%를 넘어서고 있다.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은 1907년에 도입되었으며 1910년 이후 초등학교 취학률은 98%에 도달하여 거의 모든 일본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중등교육은 1940년에 들어서 급팽창을 하게 되는데 특히 1940년 46%에서 1947년 61.7%로 중학교 취학률이 증가하였다. 1940년 중학교 취학률의 급격한 증가는 특히 1947년 도입된 중학교 의무교육제와 더불어 교육확대를 가져온 단선형 학제의 도입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2) 1930년대 초등교육의 확대는 조선인들의 교육확대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인을 국가총력전 수행을 위해 병력자원화하려는 식민지 군부의 정책적 의도의 결과로 비롯되었다. 이 시기 조선의 초등교육은 천황과 일본제국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인간(‘황국신민’)의 양성을 근본 목적으로 하였으며 1938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소학교는 1941년에 창설된 전시총동원형 초등교육기관인 국민학교로 개편되었다(정규영, 2002: 35)

[그림 3]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 진학률 추이(1965-1990)



출처: 교육인적자원부교육개발원(2003), 文部科學省(2004)

세계 2차 대전 전후의 교육정책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의 교육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70년에서 1990년까지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이다. [그림 3]은 양 국가에서 고등교육 진학률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양 국가에서 고등교육은 동일하게 전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1970년부터 199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증가 양상은 완전히 달랐다. 일본의 경우 진학률은 1975년 39%에서 1990년 37%로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다. 이는 1975년에 이루어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것은 명문화된 고등교육 억제정책의 하나(Ishida, 2003: 10)로 5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립대학의 설치 및 학부학과의 설치나 정원 확대를 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일본 정부는 1975년 이처럼 고등교육을 억제하는 대신, 전수학교(專修學校)라는 독특한 중등후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의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적 수요를 대체하고자 했다. 전수학교는 종래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학교’에 포함되지 않고 학교 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각종학교에 포함되었으나 1975년 학교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수학교 전문과정인 전문학교(專門學校)는 우리나라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단기대학(短期大學), 고등전문학교(高等專門學校)에 준하는 것으로, 전수학교 고등과정인 고등전수학교(高等專修學校)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전수학교(전문과정)는 종래의 각종학교 제도를 정규 학교에 가까운 것으로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별도의 교육시스템이며 따라서 고등교육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喜多村和之, 1995[1986]: 89). 다만, 전수학교는 정규교육 이후의 계속 교육(further education) 혹은 평생 교육(lifelong education)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이면서도 전문사(專門士)라는 학위가 부여되는 공식학교라는 점에서 매우 복합적인 형태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동일기간 급격한 고등교육의 확대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1980년 고등교육 진학률은 27.2%였으나 불과 5년 후 36.4%로 증가하였다. 1981년은 1980년의 7.30 교육개혁조치가 실시된 첫 해로 졸업정원제의 실시에 따라 대학 입학 정원에 졸업정원의 30%를 더 추가했던 해이다. 당시 정부는

1970년대까지 유지되어왔던 고등교육 억제와 직업교육의 강화 정책과는 달리 졸업정원제로 특징 지워지는 고등교육 확대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졸업정원제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엄격하게 졸업 여부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늘어난 입학 정원은 고스란히 대학 졸업자들의 확대로 이어졌다(김영화·박인중, 1990).

한국과 일본의 사회계층간 교육격차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기회의 전환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많은 연구자들은 교육 불평등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나(방하남·김기현, 2003; 장상수, 2004; 近藤博之, 1999, 2000; 荒牧草平, 2000; 尾嶋史章, 1990; Ishida, 2003; Kim, 2005; Park, 2003; Treiman and Yamaguchi, 1993), 이 연구들은 이러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두 국가의 교육 불평등 추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말해주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두 시기(1940년대 중반 전후, 1975-1980년 전후)의 교육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첫 째, 전후 구학제에서 신학제로의 변화가 한국과 일본에서 사회계층간 교육격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이다. 이 연구는 특별히 이 시기 의무교육의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전후로 사회계층간의 교육격차가 감소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 한국은 1946년을 기점으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일본은 1947년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입하였다. 둘 째, 1970년대 중반이후 고등교육에 대한 두 국가의 상반된 정책이 사회계층간 교육격차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부이다. 일본 정부는 1970년 중반 고등교육의 확대에 대한 억제정책을 5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 반면, 한국 정부는 1980년을 기점으로 졸업정원제의 실시를 통해 의도하지 않게 빠른 고등교육의 확대를 가져왔다.

IV. 분석 자료, 변수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및 변수

가. 분석자료

이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로는 표본 크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 배경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여러 자료들을 병합해(pooling) 사용하였다. 한국에 대한 분석은 1990년과 1995년에 조사가 이루어진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연구’ 제1-2차년도 자료³⁾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5차년도(2002년)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가 이용되었다. 일본에 대한 분석은 1955년부터 50년 간 10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회계층과 사회이동 조사

3) 이 조사는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에서 진행했으며 이 자료는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의 한국사회조사데이터아카이브(KOSSDA, <http://www.kssl.or.kr/>)로부터 제공받았음을 밝힌다. 이 자리를 빌어서 흔쾌히 자료 이용을 허가해 준 관련자 분들에게 감사 را 드린다.

(SSM: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Survey)⁴⁾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일본일반사회조사(JGSS: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⁵⁾'를 이용하였다

나. 분석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 변수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상급학교로의 진학 여부이다. 신학제로의 전환을 다루는 첫 번째 분석에서 한국의 경우 종속변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 여부가 되며 일본의 경우 종속변수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여부가 된다. 고등교육 확대/억제정책을 다루는 두 번째 분석에서 두 국가를 분석할 때 종속변수는 공통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전문대 포함)으로의 진학 여부가 된다. 이 때 고등교육 진학여부는 진학한 고등교육의 경로를 고려하여 (1) 일반대 진학, (2) 전문대 진학, (3) 고졸 미진학 등의 배타적인 경로로 정의한 후 기준범주를 고졸 미진학으로 잡아 미진학 대비 일반대 진학, 미진학 대비 전문대로 진학할 확률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추정하게 된다.

2) 독립 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들은 가족 배경 변수들과 성별, 그리고 교육정책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변수들로 구성된다. 먼저 가족배경변수들로는 아버지의 교육(*FEDUC*), 아버지의 직업 등이 포함되었다. 부모의 교육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최종 졸업학교의 수학연수로 측정하였는데, 부모의 최종 학교 졸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수료 혹은 중퇴일 때는 절반값을 부여하였다. 한편, 일본 자료의 경우 구학제에 기초한 학교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졸업한 학교의 실제 수학연수를 환산하여 계산하였다⁶⁾.

4) 1955년, 1965년, 1975년, 1985년, 1995년 조사가 이루어진 사회계층과 사회이동 조사(SSM: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Survey) 자료의 이용은 2005년 SSM 조사연구회(社会階層と社会移動調査研究会)의 허락을 얻어 이루어졌다(<http://www.sal.tohoku.ac.jp/coe/ssm/index.html>). 한편, SSM 조사연구회는 1995년 자료까지 일본 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과학 일본자료 아카이브(SSJデータアーカイブ)를 통해 SSM 자료를 요청하는 연구자들에게 심의를 거쳐 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홈페이지(<http://ssjda.iss.u-tokyo.ac.jp/>)를 참조하기 바란다.

5) 2000년, 2001년, 2002년 JGSS 자료의 사용은 일본 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과학 일본자료 아카이브의 허가를 얻어 이루어졌다(The data for this secondary analysis, "2000-2002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Osaka University of Commerc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of the University of Tokyo)," was provided by the Social Science Japan Data Archive, Information Center for Social Science Research on Japan, Institute of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Tokyo).

6) 일본 구제도 하의 소학교(小學校, 國民學校)는 6년, 고등소학교(高等小學校)는 8년, 지금의 고등학교에 가까운 중학교(中學校) 및 고등여학교(高等女學校)는 11년, 지금의 전문대에 가까운 전

아버지의 직업은 에릭슨과 골드소프의 사회계급 범주인 EGP 분류를 사용하였다(Erikson and Goldthorpe, 1992). 여기에서 사용한 EGP 분류는 (1) 정신노동자(*WC*, I+II+III), (2) 자영업자(*PB*, V+VI), (3) 육체노동자(*WO*, V+VI+VIIa), (4) 농민(*FA*, IVc+VIIb) 등 네 가지 범주이다⁷⁾. 여기에서 기준 범주는 상위계층인 정신노동자(*WC*)를 설정하였다.

성별(*Female*)은 단지 고등교육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만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SSM 자료의 경우 신학제 도입시기를 다루는 표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기 조사에서 남성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포에 왜곡을 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불평등과 공정성 자료의 경우도 여성 표본이 과소 표집된 점을 고려하여 신학제 도입시기를 다루는 분석에서 성별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한편, 여기에서 성별(*Female*)은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값을 부여하였다.

교육정책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출생연도와 입학연도 등 연령 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제도 효과 변수(*System*)는 교육정책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한 교육정책이 도입된 시기 이후에 응답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면 1값을, 도입 이전에 응답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면 0값을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제도 효과를 순수하게 추정하기 위해 추세 효과 변수(*Trend*)를 통제하였는데, 이 변수는 응답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할 연도에 특정한 교육정책이 도입된 연도를 뺀 값으로 측정하였다.

2. 분석모형

이 연구의 분석모형은 신학제 도입 시기의 경우 상급학교(한국의 경우 중학교, 일본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model)이며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 시기의 경우 고등교육 진학경로(대학교 진학, 전문대 진학, 미진학)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이다.

교육정책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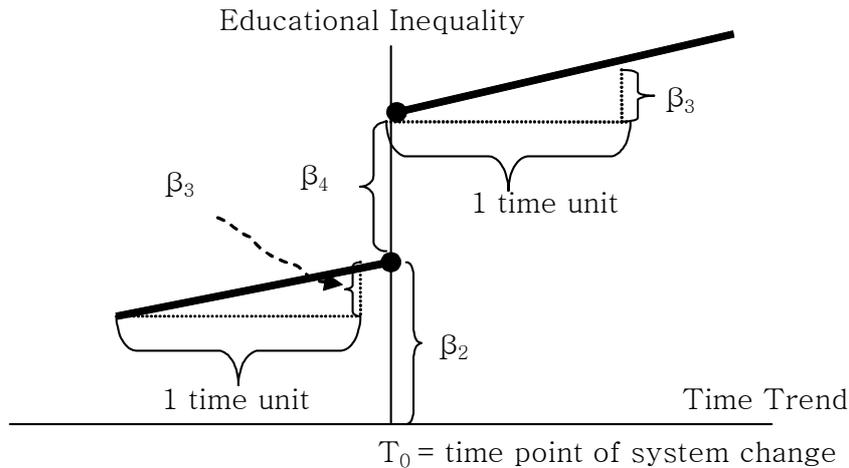
$$\log_e \frac{p}{1-p} = \alpha + \beta_1 T + \beta_2 X + \beta_3 TX + \beta_4 SX$$

여기에서 *T*는 추세 효과 변수(*Trend*)를, *S*는 제도 효과 변수(*System*)를 의미하며 *X*는 가족배경 변수들과 성별 변수 등 설명변수들의 벡터이다.

문학교(專門學校) 및 고등사범학교(高等師範學校) 등은 13년, 5년제였던 대학(大學)은 17년 등으로 계산하였다.

7) EGP 계급분류는 국제사회경제지수(ISEI)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에 기초한 직업코드를 제공하는 자료라면 보다 정확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유명한 사회계층론자인 간즈붐(Ganzenboom, H.)은 ISCO-88 코드를 EGP 계급분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 프로그램과 종사상 지위, 직장 규모 변수를 이용하여 EGP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4] 사회계층간 교육격차에 미치는 교육 정책의 효과



교육정책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수식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이는 사회계층간 교육격차로 측정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이 과거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서 β_3 는 설명변수들에 의해 추정된 불평등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추세의 정도를 의미하며 β_4 는 특정한 교육정책이 도입되어 불평등의 정도가 변한 정도를 의미한다. (유형 1) 만약 β_3 과 β_4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교육 불평등이 변화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지속적인 불평등’가설이 입증되는 것이다. (유형 2) 만약 β_3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추세 변화만이 인정될 뿐 교육정책에 따른 제도 효과는 기각되며 (유형 3) β_4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교육정책의 영향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유형 4) 만약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추세 효과뿐만 아니라 제도 효과 역시 입증된다. 이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신학제의 도입시기와 고등교육 확대/억제 추진시기에 대한 분석에서 유형 3이나 유형 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기준시점은 신학제 도입시기의 경우 한국은 1947년, 일본은 1946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고등교육 확대/억제 정책 시기의 경우 한국은 1981년이며 일본은 1975년으로 설정하였다. 전자는 의무교육이 시도된 시점(한국은 초등학교, 일본은 중학교)을 기준으로, 후자는 해당 정책이 추진된 시점(한국은 졸업정원제, 일본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시기의 범위는 교육정책이 추진된 전후 5년간이라는 기간으로 한정하였다. 이것은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인데, 먼저 분석시기의 범위를 좁힐수록 해당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한국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 분석기간을 1946년에서 1950년 입학시기까지로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고등교육 확대/억제 정책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5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해당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1940년대 중반 신학제 도입 시기에 대한 분석에서 한국의 분석 사례는 1930년부터 1939년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교 남자 졸업생들이 되며 일본의 분석 사례는 1928년부터 1937년 사이에 태어난 중학교 남자 졸업생들이 된다. 고등교육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한국의 분석 사례는 1958년부터 1967년 사이에 태어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되며, 일본의 분석 사례는 1953년부터 1962년 사이에 태어난 고

등학교 졸업생들이 된다. 한편, 해당 분석의 표본수는 분석 모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결과표를 제시할 때 명기하였다.

V. 분석결과

1. 1940년대 구학제에서 신학제로의 변화 시기 분석

<표 1>은 1930년부터 1939년 사이에 태어난 한국의 초등학교 남자 졸업생들의 중학교 진학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1930년부터 1939년 사이에 태어난 한국의 초등학교 남자 졸업생들의 중학교 진학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N= 710)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B	B	B	B	B
Constant	1.19*	1.18*	1.18*	1.21**	1.19*
FEDUC	0.17***	0.17***	0.17***	0.16***	0.09
PB	0.02	0.10	0.31	0.02	0.05
FA	-1.35**	-1.32**	-1.39**	-1.36**	-1.35**
WO	-1.54**	-1.80**	-1.49	-1.55**	-1.50*
trend	0.12***	0.27	0.27	0.11**	0.11**
trend × PB		-0.22	-0.17		
trend × FA		-0.16	-0.18		
trend × WO		0.001	0.08		
system × PB			-0.38		
system × FA			0.12		
system × WO			-0.60		
trend × FEDUC				0.01	-0.02
system × FEDUC					0.14
model chi-square	109.7	112.0	112.3	109.9	112.3
df	5	8	11	6	7
Deviance	869.9	867.6	867.3	869.7	867.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모형 1은 설명변수들의 독립된 효과만을 추정한 것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FEDUC*)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정신노동자(*WC*)인 경우 농민(*FA*)이나 육체노동자(*WO*)인 경우보다 중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추세변수(*Trend*)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연령이 낮을수록 중학교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모형 2와 모형 4는 추세 변수와 설명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

고 모형 3과 모형 5는 추세 변수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 변수와 설명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에서 모든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형 1, 곧 사회계층간 격차는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지속적인 불평등’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신학제 도입과 의무교육제도의 추진 이후에도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는 한국에서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표 2> 1928년부터 1937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중학교 남자 졸업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N= 3,017)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B	B	B	B	B
Constant	-1.08***	-1.07***	-1.07***	-1.15***	-1.13***
FEDUC	0.28***	0.28***	0.28***	0.29***	0.32***
PB	-0.62***	-0.63***	-0.49*	-0.61***	-0.63***
FA	-1.41***	-1.43***	-1.07***	-1.40***	-1.42***
WO	-1.08***	-1.10***	-1.19***	-1.07***	-1.09***
trend	0.04**	0.01	0.01	0.16**	0.17**
trend × PB		0.00	0.04		
trend × FA		0.05	0.15**		
trend × WO		0.03	0.01		
system × PB			-0.26		
system × FA			-0.66**		
system × WO			0.19		
trend × FEDUC				-0.02*	-0.01
system × FEDUC					-0.05**
model chi-square	577.3	579.8	590.1	582.1	589.3
df	5	8	11	6	7
Deviance	3599.5	3596.9	3586.7	3594.7	3587.5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2>는 1928년부터 1937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중학교 남자 졸업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의 결과는 한국의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한국에서는 정신노동자(WO)와 자영업자인 뽀띠 부르조아(PB)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교육격차가 발견되고 있지 않은 대신 일본에서는 둘 간의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의 경우 정신노동자(WO)와 육체노동자(WO)간의 교육 격차가 가장 큰데 비해 일본의 경우 상류 계층과 농민(FA)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설명변수들과 추세변수(Trend) 혹은 제도변수(System)와의 상호작용항의 결과이다. 먼저 아버지의 직업과 이들 변수간의 상호작용항은 농민(FA)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세변수(Trend)와 농민(FA)간의 상호작용항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대신, 제도변수(System)와 농민(FA)간의 상호작용항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이 결과는 교육정책의 변화가 사회계층간 교육격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동시에 이 결과는 농민(FA)과 정신노동자(WO)간의 교육 격차가 이 기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신학제의 도입이라 제도 변화 후 둘 간의 격차를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왜 이런 모순적인 결과가 나왔는가? 이는 전후 일본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후 1950년까지 일본에서 농민층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原純輔 盛山和夫, 1999), 이는 식민지에 거주하다 본국으로 되돌아간 이주민들과 퇴역 군인들 중 상당수가 농민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가난한 농민들의 증가는 일시적으로 상류계층과의 교육 격차를 확대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해석이 틀리지 않다면 일시적으로 정신노동자(WO)와 농민(FA) 간의 교육 격차가 신학제 도입 이후에 증가한 것은 교육제도의 변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사회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제도변수(System)간의 상호작용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세변수(Trend)와의 상호작용항은 제도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유형 3, 곧 아버지의 교육수준으로 측정된 사회계층간 교육격차는 어떤 일관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기보다는 신학제 도입과 의무교육의 추진이라는 교육정책의 변화에 의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정책이 사회계층간 교육격차를 줄어든다고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인데 상류층의 상급진학 진학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지 않는다면(상류층이 모두 진학하지 않는다면) 교육 불평등은 지속된다는 MMI 가설이 예측한 것과 다른 결과이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 교육정책의 변화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영향을 약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감소시켰는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학제는 이 시기에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이 중학교 시기부터 구분되는 복선형 학제에서 미국식의 단선형 학제로 바뀌었다. 이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 불평등을 감소시킬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이라는 교육경로에 대한 선택이 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단계로 옮겨갔다는 점이다. 곧, 구학제 하에서 직업교육기관인 중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힘들었으나 신학제 하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부모들도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을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둘째, 의무교육이 현실화되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동일한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부모들 둔 자녀들도 이제 유사한 내용을 배울 수 있게 되면서 고등학교 진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표 1>의 한국의 결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유사하게 신학제를 도입하고 의무교육의 확대를 추진했으나 이러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사회계층간 교육격차를 낮추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이 기간 중에 사회계층간 교육격차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했는가? 이는 형식적으로 유사한 교육개혁이 두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나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의무교육제도의 추진은 재정적인 뒷받침 하에 이루어져 무상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렸으나 한국에서 의무교육제도는 정부에 의해서 몇 차례 선언되었으나 무상교육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미군정 하에서 추진된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는 예산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김경미, 2001: 38).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도 1950년 6월 1일을 기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한국전쟁이 반발하였고 이후 1954년부터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이 추진되었으나 국방비의 방대한 지출로 6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1959년에도 무상교육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2. 1970-80년대 고등교육 정책 변화 시기 분석

<표 3>은 1958년부터 1967년 사이에 태어난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 모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은 설명변수들의 독립된 효과만을 추정한 것으로 아버지의 교육 수준(*FEDUC*)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정신노동자(*WC*)인 경우 자영업자(*PB*)나 농민(*FA*), 육체노동자(*WO*)인 경우보다 대학이나 전문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 성별(*Female*)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대학이나 전문대에 진학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추세변수(*Trend*)의 경우 전문대 진학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대학 진학의 경우에만 정(+)¹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전문대보다는 대학의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졸업정원제의 도입과 관련이 있다. 이 기간 중 대학의 경우 정원 외 30%를 추가로 모집한 반면, 전문대의 경우 정원 외 15%의 추가 모집만을 허용하였다.

기본 모형에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들에서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는 대학 문호가 급격히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층간이나 성별 교육격차는 이 기간 동안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미진학 대비 전문대 진학에 있어서 제도변수(*System*)와 자영업자(*PB*)간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진학 대신 전문대에 진학하는데 있어서 정신노동자(*WC*)와 자영업자(*PB*) 자녀의 교육 격차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기보다는 1981년 이후에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표 4>는 1953년에서 1962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기본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FEDUC*)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정신노동자(*WC*)일 때 대학 진학의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 성별(*Female*)의 경우 미진학 대비 대학교 진학의 경우와 미진학 대비 전문대 진학의 경우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곧, 대학교 진학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리한 반면 전문대 진학에 있어서 여학생의 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대학이 성별로 분절화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에서 전후 4년제 대학교는 남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단기대학의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 여학생들이었다.

다음으로 모형 2부터 모형 7까지는 미진학 대비 4년제 대학교 진학 여부와 미진학 대비 단기대학 진학 여부에 있어서 교육정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4년제 대학교 진학 여부에 있어서 가족배경 및 성별 변수들과 추세 변수(*Trend*), 제도 변수(*System*)와의 상호작용항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대학교 진학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속적인 불평등’ 가설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 억제정책이 불평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표 3> 1958년부터 1967년 사이에 태어난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전문대) 진학여부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N= 1,998)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대학교/미진학	B	B	B	B	B	B	B
Constant	-0.61**	-0.60**	-0.63+	-0.65**	-0.64**	-0.61**	-0.75**
FEDUC	0.13***	0.13***	0.13***	0.13***	0.12***	0.13***	0.13***
PB	-0.58**	-0.59**	-0.60	-0.58**	-0.60**	-0.58**	-0.59**
FA	-1.24***	-1.27***	-1.37**	-1.25***	-1.26***	-1.24***	-1.25***
WO	-1.19***	-1.21***	-1.61**	-1.19***	-1.19***	-1.19***	-1.20***
Female	-1.18***	-1.18***	-1.19***	-1.19***	-1.19***	-1.18***	-1.12**
trend	0.06**	0.09*	0.09	-0.02	-0.02	0.06*	0.02
trend × PB		-0.03	-0.04				
trend × FA		-0.08	-0.10				
trend × WO		-0.02	-0.12				
system × PB			0.05				
system × FA			0.17				
system × WO			0.68				
trend × FEDUC				0.01+	0.01		
system × FEDUC					0.03		
trend × Female						0.002	0.02
system × Female							0.24
전문대/미진학	B	B	B	B	B	B	B
Constant	-0.88**	-0.88**	-0.62	-0.88**	-0.89**	-0.88**	-0.71*
FEDUC	0.06**	0.06**	0.06**	0.06**	0.07**	0.06**	0.06**
PB	-0.45*	-0.45*	-0.01	-0.45*	-0.44*	-0.45*	-0.44*
FA	-1.26***	-1.26***	-1.89***	-1.26***	-1.26***	-1.26***	-1.23***
WO	-0.85***	-0.86**	-1.66*	-0.85**	-0.85***	-0.85**	-0.85**
Female	-0.69***	-0.69***	-0.71***	-0.69***	-0.69***	-0.70***	-1.12**
trend	0.03	0.03	0.10	0.03	0.03	0.03	0.07
trend × PB		-0.002	0.12				
trend × FA		0.01	-0.16				
trend × WO		-0.004	-0.21				
system × PB			-1.26*				
system × FA			1.09				
system × WO			1.38				
trend × FEDUC				0.001	0.004		
system × FEDUC					-0.02		
trend × Female						-0.01	-0.12
system × Female							0.43
model chi-square	364.2	366.7	376.9	367.6	369.8	364.2	687.2
df	12	18	26	14	16	14	18
Deviance	1566.7	1564.2	1554.0	1563.3	1561.1	1566.7	3023.2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4> 1953년부터 1962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전문대) 진학여부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N= 2,418)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대학교/미진학	B	B	B	B	B	B	B
Constant	-2.02***	-2.02***	-2.02***	-2.01***	-2.01***	-2.02***	-2.02***
FEDUC	0.25***	0.25***	0.25***	0.25***	0.25***	0.25***	0.25***
PB	-0.43**	-0.44**	-0.28	-0.43**	-0.43**	-0.43**	-0.43**
FA	-1.19***	-1.20***	-1.03***	-1.20***	-1.20***	-1.20***	-1.20***
WO	-0.95***	-0.95***	-0.94***	-0.95***	-0.95***	-0.95***	-0.95***
Female	-1.38***	-1.38***	-1.38***	-1.38***	-1.38***	-1.39***	-1.49***
trend	-0.01	-0.02	-0.02	0.05	0.05	-0.03	-0.03
trend × PB		0.02	0.06				
trend × FA		0.00	0.05				
trend × WO		0.02	0.03				
system × PB			-0.29				
system × FA			-0.34				
system × WO			-0.02				
trend × FEDUC				-0.01	-0.01		
system × FEDUC					0.00		
trend × Female						0.05	0.02
system × Female							0.19
전문대/미진학	B	B	B	B	B	B	B
Constant	-3.22***	-3.22***	-3.21***	-3.23***	-3.23***	-3.22***	-3.21***
FEDUC	0.13***	0.14***	0.14***	0.14***	0.13***	0.13***	0.13***
PB	-0.33+	-0.34+	-0.95*	-0.34+	-0.34+	-0.33+	-0.34+
FA	-0.47**	-0.48**	-0.84*	-0.48**	-0.48**	-0.47**	-0.48**
WO	-0.51**	-0.57**	-0.77*	-0.55**	-0.55**	-0.52**	-0.52**
Female	1.37***	1.36***	1.37***	1.37***	1.37***	1.37***	1.17***
trend	0.02	-0.02	-0.02	0.21**	0.21**	0.01	0.01
trend × PB		0.02	-0.14				
trend × FA		0.03	-0.07				
trend × WO		0.11+	0.05				
system × PB			1.07+				
system × FA			0.65				
system × WO			0.37				
trend × FEDUC				-0.02**	-0.02*		
system × FEDUC					0.01		
trend × Female						0.01	-0.04
system × Female							0.38
model chi-square	802.9	806.7	813.6	810.2	810.3	804.5	806.3
df	12	18	24	14	16	14	18
Deviance	1878.7	1874.9	1868.0	1871.4	1871.3	1877.1	1875.3

주: + P < 0 .1 * P < 0.05, ** P < 0.01, *** P < 0.001

전문대 진학 여부에 있어서 모형 4와 모형 5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FEDUC*)과 추세 변수 (*Trend*)간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곧 전문대 진학에 있어서 아버지의 교육수준(*FEDUC*)이 미치는 영향은 이 기간 중 점진적으로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VI.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상급학교 진학 여부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의 시계열적 추이가 교육 정책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들은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는 빠른 교육확대에 불구하고 지난 세기동안 지속되어왔으며 어떠한 형태의 교육개혁도 교육 불평등의 본질을 바꾸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강력하게 교육에 개입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정부 강력한 정책은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양 국가에서 매우 강력한 교육개혁이 추진된 시기에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1945년 2차대전 이후 구학제에서 신학제로 전환된 시점에 대한 분석에서 단지 일본의 사례에서만 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가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한국 역시 같은 시기 상급학교 진학이 용이한 단선형 학제를 도입하고 의무교육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교육 확대를 빠르게 진전시킨 반면 상급학교 진학 여부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교육기회의 불평등까지 감소시키지는 못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 정부가 공공재원의 부족으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적 투자를 하지 못한 반면, 일본 정부는 1940년대 동안 이를 실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만약 정부가 교육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확대된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규모의 유리한 계급 출신에 의해 우선적으로 채워지고 나머지 여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점유하고 있는 불리한 계급 출신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상(김영화, 1990)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다.

다음으로 1970-80년대에 추진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에서 고등교육 억제 정책을 펴던 일본과 고등교육 확대 정책을 펴던 한국 간에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의 추이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두 국가 모두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격차는 개혁이 추진된 전후 5년간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의 경우 이 시기 동안 고등교육이 급격히 팽창했지만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 진학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경쟁은 매우 치열했을 것이며 정부가 일시적으로 교육에 강력하게 개입했을지라도 교육의 계급적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졸업정

원제가 고등교육의 확대를 가져왔지만 그것을 목표로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 고등교육 억제 정책은 전국의 모든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경과 같은 대도시에 국한하여 추진되었다. 이러한 지역 간의 차이를 통제했다면 이 정책이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기대해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교육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 연구는 분석 방법론과 관련하여 정책의 효과를 연도 변수를 활용해 추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좀 더 많은 국가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거시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층모형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조사 자료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특히 한국 자료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일본의 경우 1955년, 1965년 등 매우 오래된 사회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따라 해방 전후 시기의 분석에 있어서 표본의 왜곡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고 이러한 한계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

한 가지 더 부가해서 지적한다면, 한국의 경우 지난 100년간 교육통계의 장기 시계열을 구축하는 작업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장기 시계열 자료 구축에 있어서 한일간의 격차였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1873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등의 기초통계는 물론 취학을, 진학을 등의 교육통계에 대한 정보를 장기시계열로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체로 1970년 이후부터 장기시계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과거의 문헌이나 교육기관의 자료들도 일제 강점기, 미군정기, 한국전쟁시기 등에 따라 단절된 형태로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가 단절되어 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로 자료수집상의 어려움 역시 존재하였다. 조선총독부의 통계연보 원자료(『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는 재조선 일본 학생들이 다녔던 소학교의 경우 취학을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녔던 보통학교의 경우 학교수, 학생수 등의 기초통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연도별로 대조해본 결과 일부 그 수치가 다른 사례도 발견하였다. 장기시계열 구축에 있어 더 큰 문제는 1945년 해방 이후 1960년까지의 기간이었다. 일제 강점기는 그나마 기초 통계치와 각 시기별 총인구수 및 학령인구의 추정이 가능하지만 1945년부터 1960년간에는 정비된 기초 교육통계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그 이후 발간된 각종 교육통계자료 역시 일부 일치하는 않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가장 정확한 자료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작업이 요구되었다. 향후 교육통계에 관한 지난 100년간의 장기 시계열을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경미. 2001. “보통교육정책의 전개와 그 평가.” 『한국교육사학』 23(2): 37-55.
- 김영화. 1990. “고등교육 팽창의 결과: 고등교육 기회 획득에 미치는 출신 배경의 영향 추이 (1967-1984).” 『교육학연구』 28(3): 65-81.
- 김영화·박인중. 1990. 『한국 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학교교육체제의 대응: 한국산업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인화·최재선·이명근. 2001. “해방 이후 반세기의 현장 자료분석을 통한 교육현장의 정치역학적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3(1): 21-92.
- 문교부. 1958. 『문교월보』 40호(7월).
- 문교부. 1959. 『문교월보』 47호(8월).
- 문교부. 1965. 『문교통계연보』.
- 방하남·김기현.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4): 31-65.
- 오성철. 1999. “식민지기 초등교육 팽창의 사회사-전북지역 사례연구” 『초등교육연구』 13(1): 5-29.
- 이광호. 1991. “한국 교육체제 재편의 구조적 특성: 1945~1955년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연구』 3(1): 131-159.
- 이길상. 2003. “미군정기 초등교육의 변화.” 『한국교육사학』 25(2): 75-110.
- 이혜영·윤중혁·류방관. 1997.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Ⅱ)-일제시대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정규영. 2002. “전시동원체제와 식민지 교육의 변용: 일본 식민지 지배하의 한국교육, 1937-1945.” 『교육학연구』 40(2): 35-64.
- 장상수. 2004. “학력성취의 계급별·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38(1): 51-75.
- 주익중. 1998. “1930년대 중엽 이후 조선인 중등학교의 확충.” 『경제사학』 24: 97-137.
- 한국교육개발원. 1984. 『한국의 교육지표』.
- 한국교육신문사. 1967. 『한국교육연감』.
-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1960. 『한국교육십년사』. 서울: 풍문사.
- 허수열. 2005. 『개발 없는 개발: 일제하 조선 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은행나무.
- 荒井一博, 2003. 『教育の經濟學: 大學進學行動の分析』. 有斐閣.
- 荒牧草平, 2000. “教育機會の格差は縮小したか: 教育環境の變化と出身階層間格差.” 近藤博之編. 『日本の階層システム3-戦後日本の教育社會』. 東京大學出版會. Pp. 15-36.
- 尾嶋史章. 1990. “教育機會の趨勢分析” 竹池城司編. 『現代日本 社會階層3 -教育と社會移動』. 東京大學出版會. Pp. 25-55.

- 喜多村和之, 1986. 『高等教育の比較的考察』. 玉川大學出版部(김도수 옮김. 1995. 『고등교육의 혁신』. 교육과학사).
- 近蘇博之, 1999. “メリトクラシー假説と教育機會の趨勢.” 『社會學評論』 50(2): 181-196.
- 近蘇博之, 2000. “階層研究と教育社會 位相.” 近蘇博之編. 『日本の階層システム3-戦後日本の教育社會』. 東京大學出版會. Pp. 3-14.
- 文部省調査局. 1962. 『日本の成長と教育』. 文部省.
- 文部科學省. 2004. 『データからみる日本の教育(Japan's Education at a Glance)』. 國立印刷局.
- 原純輔盛山和夫, 1999. 『社會階層 -豊かさの中の不平等』. 東京大學出版會(정현숙 옮김. 2002. 『일본의 사회계층: 풍요 속의 불평등』. 한울).
- 古川宣子. 1996.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中高等教育.” 『日本植民地研究』 8:18-32.
- 木村光彦. 1997. “近代祖先の初等教育” 板谷茂 外. 『アジア發展のカオス』. 東京: 勁草書房. Pp. 29-63.
- 朝鮮總督府. 1931. 『昭和四年朝鮮總督府統計年譜』.
- 朝鮮總督府. 1941. 『昭和十四年朝鮮總督府統計年譜』.
- Blossfeld, H. and Shavit, Y. 1993. 'Persisting Barriers: Changes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Thirteen Countries', in Shavit, Y. and Blossfeld, H.(eds),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pp. 1-23.
- Breen, R. and Goldthorpe, J.H. (1997) 'Explaining Educational Differentials', *Rationality and Society* 9: 275-305.
- Buchman, C. and Hannum E. (2001)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Review of Theories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77-102.
- Chang, Sang-su (2003) 'Patterns and Changes of Educational Attainment in Korea.', The Annual Meeting of Research Committee o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RC28),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Tokyo, Japan.
- Deng, Z. and Treiman, D. (1997) 'The Impact of the Cultural Revolution on Trends in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391-428.
- Dronkers, J. (1993) 'Educational Reform in the Netherlands: Did it Change the Impact of Parental Occupation and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66(4): 262-277.
- Gamoran, A., Shavit, Y., and Arum, R. (2004) 'Inclusion, Not Diversion: Findings From a 15-Nation Study of Expansion and Strat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The Annual Meeting of Research Committee o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RC28),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Rio de Janeiro, Brazil.
- Garnier, M, Hage, J., and Fuller, B. (1989) 'The Strong State, Social Class, and Controlled School Expansion in France, 1881-1975',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2): 279-306.
- Hout, M., Raftery, A. E., and Bell, E. O. (1993) 'Making the Grade: Educational Strat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1925-1989', in Shavit, Y. and Blossfeld, H. (eds),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pp. 25-49.
- Ishida, H. (2003) 'Educational Expansion and Inequality of Access to Education in Japan', The Annual Meeting of Research Committee o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RC28), International Sociological

- Association, New York, Unites State of America.
- Kim, Ki Hun (2005) 'Educational Expansion and Inequality: Social Class and Gender Differentials in School Transitions in Korea', Annual Report of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The 21st Century Center of Excellence Program. Tohoku University, pp. 135-164.
- Lillard, L. A. and Willis, R. J. (1994) 'Intergenerational Educational Mobility: Effects of Family and State in Malaysia'.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4): 1126-1166.
- Mare, R. D. (1993) 'Educational Stratification on Observed and Unobserved Components of Family Background', in Shavit, Y. and Blossfeld, H. (eds),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pp. 351-376.
- Park, Hyunjoon (2003) 'Educational Expansion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Annual Meeting of Research Committee o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RC28),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Unites State of America.
- Post, D (1994) 'Educational Stratification, School Expansion, and Public Policy in Hong Kong', *Sociology of Education*, 67: 121-138.
- Raftery, A. E. and Hout, M. (1993)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Reform,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1921-75', *Sociology of Education* 66(1): 41-62.
- Smith, H. L. and Cheung, Paul P. L. (1986) 'Trends in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on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Philippine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6): 1387-1408.
- Treiman, D. J. and Yamaguchi, K. (1993) 'Trends in Educational Attainment in Japan', in Shavit, Y. and Blossfeld, H. (eds),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pp. 229-249.
- Zhou, X., Moen, P. and Tuma, N. (1998) 'Educational Stratification in Urban China, 1949-1994', *Sociology of Education*, 71: 199-222.